

KIAT, ‘5극3특’ 지역산업 맞춤 육성

민병주 원장 “기업지원 설계 때
초광역권 최대한 고려할 방침”

규제·인재·재정·금융·R&D
‘5중세트’ 포함 육성계획 수립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현 정부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을 축으로 지역별 산업 생태계 맞춤 육성에 나선다. 기술개발, 인재양성, 금융지원까지 기업 성장 전 주기를 초광역권 중심으로 묶어 지역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극3특 기반 산업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지역 산업 환경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묶음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지원 사업 전반을 설계할 때 초광역권을 최대한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극3특은 서남·중부·대경·동남·수도권의 5대 권역과 강원·전북·제주의 3대 특별지역을 아우르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이다.

KIAT는 지역 기업 대상 기술개발(R&D) 지원 예산을 늘리는 동시에, 기존 시·도 단위 사업 구조를 5극3특 초광역권 체제로 재편한다.

그간 14개 시·도로 나뉘어 운영되던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초광역권 중심으로 통합되며, 예산도 2025년 512억원에서 2026년 841억원으로 64% 확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된다. 과제 기획 단계에서 지역 자율성은 높이고, 대형 사업 중심으로 지원 규모를 키운 것이 특징이다.

지방정부와 협의해 지역에 투자하는 이전·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 R&D 사업(42억원)도 새로 추진한다. 중견(후보)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월드클래스플러스, 상생형 협력 R&D사업도 지역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하는 등 5극3특 기반으로 예산 배분을 조정한다.

특히 지역 소재 중견기업에 전체 예산의 최소 60%(150억원)를 배정해, 초광역권 산업 생태계의 ‘앵커 기업’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초광역권 내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사업도 전년 40억원에서 113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춘 인력 양성에도 속도를 낸다. KIAT는 탄소중립 분야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재직자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7억원)을 신설하고, 국내 대학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100명을 지역 기업 인턴ship으로 연계하는 사업(30억원)도 새롭게 도입한다.

지방 투자기업의 초기 가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14억원)도 추진된다. 재직자 대상 첨단산업 아카데미(180억원)는 교육 거점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6곳을 추가 선정하는 특성화대학원(180억원)과 단기 집중 교육과정인 부트캠프(41개 추가 선정, 584억원)를 선정할 때도 5극3특 성장엔진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제조기업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유도하는 보조금 사업(1000억원)과 기술개발 자금 융자(900억원)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 추진된다.

이을라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타격을 받은 철강·알루미늄·구리, 자동차 부품 업종을 대상으로 한 이차보전 사업(100억원)도 1분기 중 시작된다. 특히 여수·포항·서산·광양 등 산업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은 151억원으로, 전년(11억원) 대비 대폭 확대된다.

KIAT는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중앙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규제·인재·재정·금융·R&D를 아우르는 범부처 ‘5중 세트’를 포함한 성장엔진 육성계획 수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산업부,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2조 투입

첨단전략산업·고부가치화 등 지원
소재개발 분야에 AI 첫 활용 계획도

산업통상부가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전년 대비 9.6% 늘어난 1조2910억원을 투입한다. 철강·석유화학의 고부가 전환과 첨단산업 공급망 대응, 소재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AI) 연계를 핵심 축으로 한 투자다.

산업부는 “202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11일 공고하고, 올해 총 1조2910억원(계속과제 1조1704억원, 신규과제 120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1454억원, 디스플레이883억원, 이차전지 1257억원, 바이오 1112억원 등 첨단전략산업에 4706억원을 투입해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한다. 기계금속(3085억원), 자동차(902억원), 화학(1470억원) 등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와 친환경 전환에는 8204억원을 배정했다. 우주·항공(694억원), 수소(245억원) 등 미래 유망산업 투자도 포함됐다.

이번 신규과제는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첨단산업 공급망 대

응 ▲소재 개발과 AI 연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철강·석유화학분야 고부가 전환을 위해 30개 과제, 22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초심도 시추환경용 초내부식 강관 소재, 초저온·고강도 특수강, 방산·발전용 핵심 구조부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 석유화학분야에서는 이차전지용 초박막 폴리프로필렌(PP) 필름, 전장부품용 초고순도 PP 등 스펙셜티 화학 소재 개발을 지원한다.

첨단산업 공급망 대응 과제로는 65개 과제에 427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AI 반도체용 초고순도 구리(Cu) 소재, 피지컬 AI 디바이스용 유리기판 소재·부품, 제련 부산물을 활용한 희소금속 정련 기술 개발 등이 대상이다.

특히 산업부는 올해 처음으로 소재 개발 분야에 AI를 활용하는 ‘소재 AI 연계 과제’를 도입한다. 공공연구소 소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가상공학 플랫폼과 연계해 특성 예측, 구조 최적화, 가상설계·시뮬레이션 등 AI 기반 디지털 소재 개발 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유통·소비재 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산업부, 3년간 年 국비 471억 투입
국내 온라인 역직구 운영 역량 강화

정부가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과 역직구 플랫폼 구축을 동시에 지원해 K-소비재 수출 판로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매년 국비 471억원을 투입해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와 K-소비재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 유통거점을 확보한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의 동반 진출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통관·인증·물류 등 수출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재 기업

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매년 해외 진출 유통기업 8곳과 역직구 관련 기업 5곳을 선정해 해외 현지조사, 마케팅, 물류 등을 맞춤형으로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유통기업과 소비재 기업이 함께 해외 시장에 진출하도록 해 상호 ‘윈윈’ 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역직구 지원도 강화한다. 역직구 시장 규모는 2020년 11억9000만 달러에서 2024년 29억 달러로 143% 성장한 만큼, 국내 역직구 플랫폼의 현지화와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해 해외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글로벌 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류 확산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K-소비재 수출 확대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역전기요금제도로 국가균형발전 기여

기후부, 올해 1분기 개편 추진 계획
기업 지방이동 유인하고 도움 제공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목적으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한 세부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은 지난 9일 세종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그동안 수도권에 인재가 많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수도권 근처에 머무르려고 했다”며 이 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방에서) 인재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면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이 지방으로 갈 유인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공론을 거쳐서 지역전기요금제도를 도입해 소위 기업들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 보려 한다”고 했다.

기후부는 올해 1분기 중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을 많이 이용하도록 발전량이 많은 낮 요금을 내리고 저녁과 밤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공기업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통폐합 관련해서는 4, 5월이면 경로가 압축될 것이라고 했다. 두 세 개의 경로로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게 기후부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 중지를 약속했는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법적 시한과 일치한다”며 “공기업 영역에서 발전 5사를 어떻게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지 용역이

발주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경로가 압축되면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12차 전기본에 담을 계획이다. 발전노조에서 ‘한 곳으로 통폐합’하는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발전 5사는 비슷비슷한 사업하고 있다”며 “약간의 경쟁이 필요할 지, (하나라) 통폐합하고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게 효과적일지는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 발전 5사가 각각 양수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양수발전을 전담하는 발전공기업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양수발전은 발전 5사가 할 수도 있고 한수원이 할 수도 있고 수자원공사도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총량을 관리하는 것은 기후부가 총괄하면서 각자 용이하게 해 나가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예정

주 3일 이상 해당지역 실거주해야

주민등록 거주지에 매주 사흘 이상 실제 살아야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는다. 특히 거주지가 농어촌이지만 외지에서 일하거나 대학을 다니는 경우, 기

본소득 수령을 위해선 이 같은 실거주 사실 입증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기

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지침에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도 제시됐다.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등록하고서 실제 거주한 경우에 지급한다. 또 타 지역 근무자, 대학생 등 거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를 인정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밀라노 동계올림픽서 ‘K-푸드’ 알린다

농식품부-aT, 시내 트램 래핑 광고
푸드마켓서 K-푸드 팝업 바 운영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현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K-푸드 알리기에 나섰다.

aT는 이달 28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 시내 트램을 통해 래핑 광고를 진행한다. 김치와 비빔밥 등 대표 K-푸드 12종을 일러스트로 디자인했다. 또 QR 코드를 부착해 행사 정보와 온라인 구매 정보를 전하고 있다.

올림픽이 열리는 22일까지는 밀라노 중앙역 내 유명 푸드마켓인 메르카토 첼 트랄레에서 K-푸드 팝업 바를 운영한다. 현지 셰프 프랑코 부지즈넬리와 한국인 구선영 조리장이 협업해 ▲김치굴요리 ▲된장 크림 참치요리 ▲김치 참치



‘K-푸드’ 광고를 부착한 트램이 이탈리아 밀라노 시가지를 운행하고 있다. /aT

타르타르 등 한국 발효식품을 재해석한 퓨전 메뉴를 선보인다.

또 유명 바텐더 디에고 페라리가 소주와 복분자주를 베이스로 개발한 ‘코리안 마티니’ 등 창의적인 칵테일을 소개한다. 여기에 이탈리아의 초저녁 식전주 문화인 ‘아페리티보’에 착안한 K-푸드 체형 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한국 전통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